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 15 / Mar. 2018

03

재정 인사이트

기획 특집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 편성

재정칼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

신기술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재정과 정보

이슈포커스

미국 시카고시의 참여예산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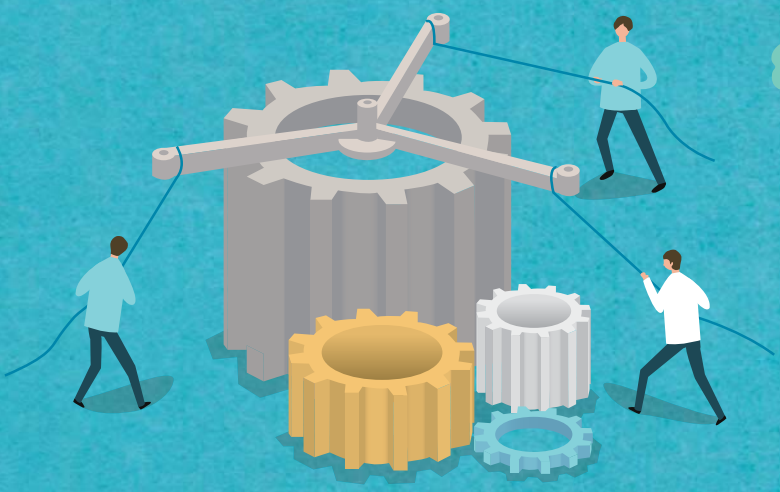
e나라도움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성공

Photo Essay
포토에세이

성공으로 향하는 비전의 실현

성공학 연구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2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며 '성공의 법칙'을 저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사 대상 중 단 5%만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5%로 분류된 그룹은 비전이 명확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지만,
95% 그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비전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이 우리의 비전에서 시작되기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MARCH
2018 Vol. 15

재정 인사이트

06 **기획특집**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온기 확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10 **재정칼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신기술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재정과 정보

22 **이슈포커스**
미국 시카고시의 참여예산제도

e나라도움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35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44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재정사업

48 **해외재정동향**
미국의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

54 **풀어쓰는 경제 · 재정이야기 ③**
대항해시대의 주인공, 스페인

5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재정 인사이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정 이야기
다양한 재정정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합니다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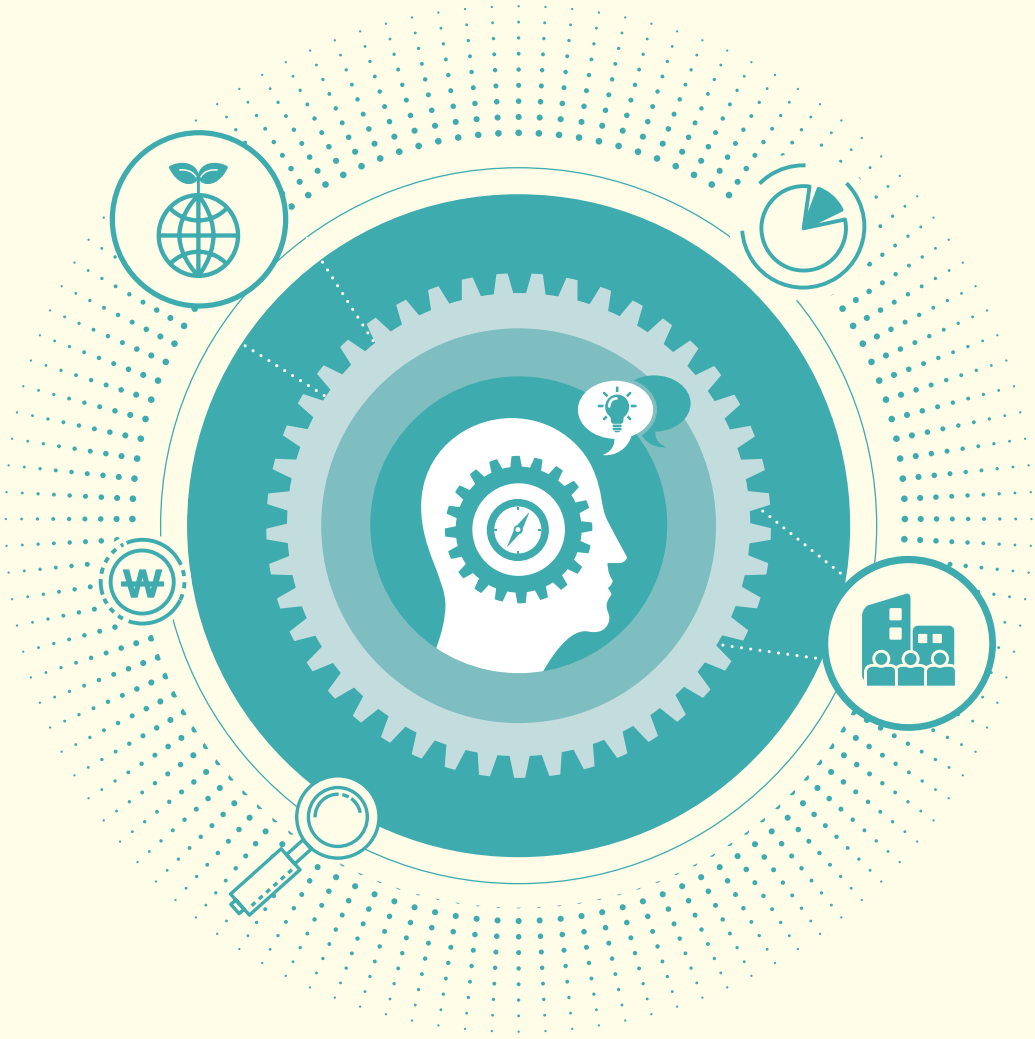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온기 확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칼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신기술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에 온기 확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soulmap4416@korea.kr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3.7% 증가한 8조 8,56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작년 추경반영 금액 11조 4,564억 원과 비교하면 약 22.7% 감소). 예산 편성 과정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높은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또는 우리 경제에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TIPS 등 성공 창업 모델에 지속 지원… R&D 분야에 1조 1,817억 원 편성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로 격상된 중기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지원정책을 총괄 · 조정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심 부처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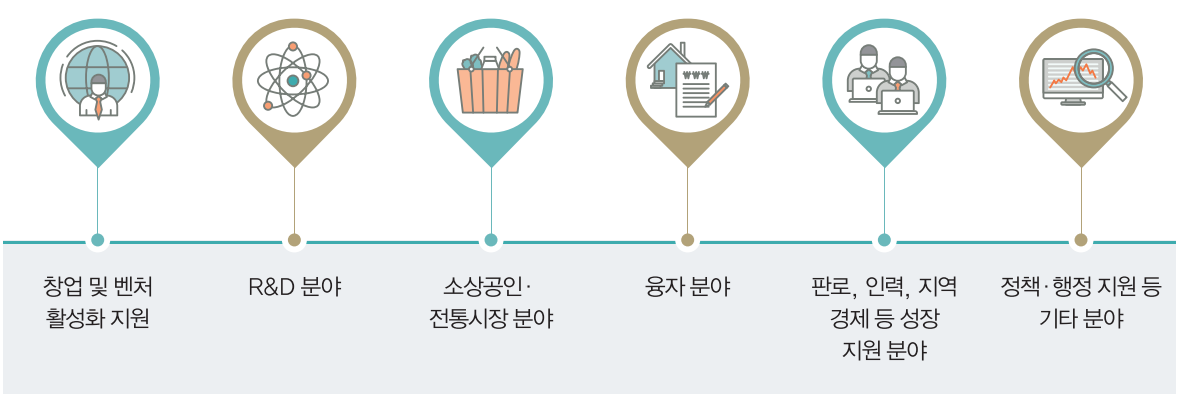
우선,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규모 증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창업 · 벤처 및 지역산업 관련 예산을 약 3,500억 원 이체받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 예산은 2017년 본예산 8조 1,900억 원에서 이체 후 8조 5,366억 원으로 4.2%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예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부문별 증감에서 드러나듯 SOC 분야 -14.2%, 문화·체육·관광 분야 -6.3%, 환경 분야 -0.3%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감축인데, 중기부의 20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3.7% 증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통한 중기부 예산의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및 벤처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018년에는 3,833억 원이 편성되었다. 특징적인 사업은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Tech Incubation Program for Startups, TIPS)'인데,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먼저 투자를 함과 동시에 자기책임 하에 창업팀을 발굴 · 보육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매칭지원을 하는 민관협업 사업이다. 창업자 육성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국내에 도입했다는 점과 수년째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예산투입과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금년에는 230여 개 창업팀을

사용 목적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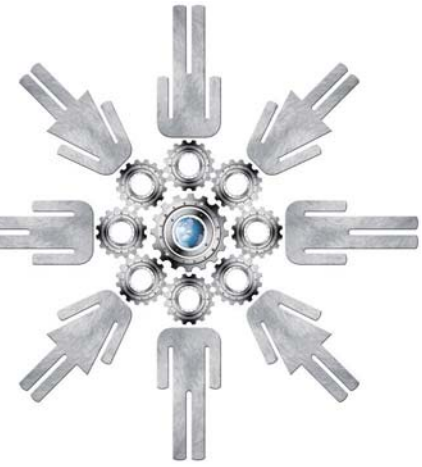


TIPS를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비즈쿨 등 기업가정신 확산, 창업보육센터(BI), 창업선도대학 지정 등 여러 가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창업 열기 확산과 창업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자금, 멘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된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는데(2018년 197억 원),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재도전이 필요한 분들의 교육이나 재창업 아이템 발굴 ·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는 R&D 분야로, R&D 출연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합쳐 1조 1,817억 원이 편성됐다. 창업초기기업이 연구 개발을 통해 한 단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가 2017년 본예산 기준 1,951억 원에서 2018년 2,727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72억 원 → 147억 원), 기술전문기업 협력 기술개발(48억 원 → 106억 원) 등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집중 지원 및 5조 3,375억 원의 융자 공급

셋째는 소상공인 · 전통시장 분야로, 5,192억 원이 편성되었다(융자 제외). 우선 전통시장의 가장 큰 불편 요인으로 꼽히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1,082억 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84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주차장 신설 43곳, 확대 45곳, 개보수 15곳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마케팅 ·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지원(527억 원), 소공인 집적 구역을 집중 지원해 현대판 장인(匠人)을 육성하는 소공인 특화지원(340억 원), 사업 전환 · 폐업 정리 · 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127억 원) 등이 증액 추진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소상공인 ·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골고루 확대해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넷째는 융자 분야로, 5조 3,375억 원이 편성되었다. 대상별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신청 가능한 중진기금 융자가 3조 8,000억 원,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진기금 융자가 1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창업기업 전용 융자가 1조 9,00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9,000억 원,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이 8,800억 원 등으로 뒤를 잇는다.

다섯째로는 판로, 인력, 지역 경제 등 성장지원 분야로 2018년에는 5,080억 원 편성됐다. 수출 분야에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지원 항목을 선택해 집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에 약 1,8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인력 분야에서는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해 우수한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에 1,043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규모이다. 지역사업 분야는 2016년까지는 지역

특구제도 운영 예산만 8억 원가량 편성됐으나, 2017년 부처 개편 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육성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2018년에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약 1,300억 원 규모가 편성되었다. 특히 14개 시도가 선정한 주력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TP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책·행정지원 등 기타 분야로 1,417억 원이 편성됐다. 이 분야에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330억 원 → 381억 원), 중소기업 정책 조사연구 · 평가 및 조정(79억 원 → 106억 원), 중기정책통합관리시스템 운영(24억 원 → 31억 원) 등 정책 기능 강화에 필수적인 예산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제도운영과 연구 ·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수준 높은 정책으로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 상황은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고령화 등 경제 활력 감소뿐 아니라 군산 · 울산 등 지역발(發) 어려움과 미국의 관세장벽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소중한 국가재정이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도움이 되는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게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kimjs@yonsei.ac.kr

PUBLIC FINANCE COLUMN

우리 경제 최대의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2017년 청년 실업률은 9.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 또한 22%에 달하고 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 역시 조기 퇴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무직의 경우 50대 초반이면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 퇴직할 경우 노동의 이동성이 유연하지 않아 재취업의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 소득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노년층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연령대에 있어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업이 늘어나는 경우 경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서 재정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려 할 경우 물가가 높아지고 가계 부채도 늘어나게 된다. 물가 상승은 임금을 높게 하고 이는 지금과 같이 기업 투자를 줄여서 일자리를 감소하게 만드는 악순환 속으로 우리 경제를 들어가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정책당국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일자리는 늘어날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은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찾아 일자리를 늘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원인 또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고용구조를 보면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며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70%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왜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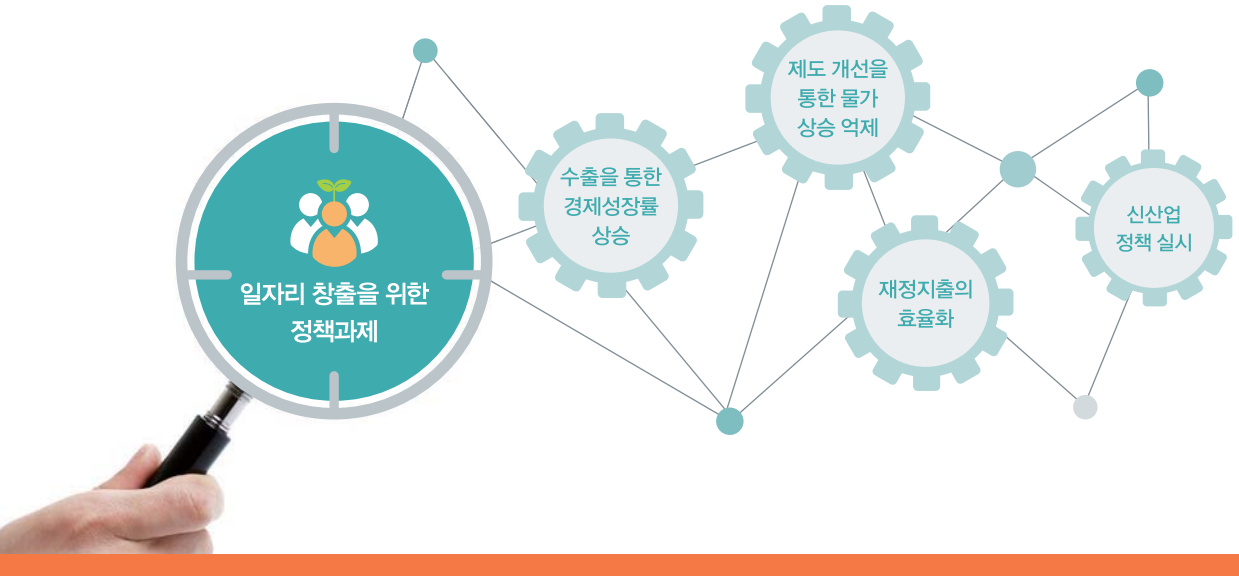
먼저 기업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과도하게 임금을 높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능력이 열등하고 기술력이 낮은 것을 강조한다. 또한 주거 비용과 교육 비용 등 생활 물가가 높아 임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불공정거래 관행도 중소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보다 50%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역시 낮은 임금으로 높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그리고 전자까지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국으로 주력산업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신산업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신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기업의 낮은 기술력이 일자리 부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임금을 낮추거나 혹은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폐렴에 걸린 환자에게 증상을 완화하는 해열제만 먹이는 것과 같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먼저 수출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내수가 작고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의존형 경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소득은 대기업에 의한 수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일자리는 벌어온 소득으로 소비하는 내수 시장에서 창출된다. 이는 대부분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주로 내수산업인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수출을 늘리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내수만 부양하면 결국 소득 없이 지출만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이 가계 부채나 정부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수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높인 후 내수를 부양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장률이 높아져 경기가 부양될 경우 비록 우리 임금이 높고 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더라도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의 원인인 주택 가격과 교육비 그리고 생활 물가를 낮추어야 한다. 생활 비용이 높을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를 줄여 고용을 줄어들게 만든다. 주택 가격을 낮추고 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물가 상승은 잘못된 유통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택 가격 또한 지금과 같이 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용적률을 늘려주는 잘못된 제도와 연관이 있다. 국민들은 새집을 선호하는데 재건축 규제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줄일 경우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재건축은 허용하면서 용적률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등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요 억제책보다 공급 확대책을 사용해야 한다. 동시에 부심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망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도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경우 임금 상승 압력 또한 낮추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당국은 추경 등으로 재정지출을 늘린 적이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이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사용처를 잘 선택할 필

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부심에 집중되게 해서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늘릴 경우 건설 부문에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을 높여 부의 불평등도 해소시킬 수 있다.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에 대비해 신산업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조선, 철강 등 고용효과가 큰 산업의 중국 이전은 국내에서 대량 실업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전자, 자동차까지 중국 이전이 예상되므로 정책당국은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이 4차산업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등 신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산업 역시 높은 기술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 전망된다. 4차 산업 발전으로 제조업은 물론 금융 등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자국 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kilkon@sun.ac.kr

PUBLIC FINANCE COLUMN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의 성장'과 '포용적 경제'라는 국정 전략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 경제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문제 인식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일자리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제로 등장한 일자리 문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끊임없이 만들어져왔다. 고용노동부의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분석해보면 2009~2016년 기간 동안 일자리 사업의 누적 참여자 수가 9.9백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중복 참여자를 제외하더라도 6백만 명의 개인이 참여해왔다.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95% 이상은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이 동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받은 금액은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에는 1.6백만 원, 지방정부 사업은 70만 원

에 불과하다. 이런 단기, 소액 사업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실업률 통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기여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노동 기회의 부여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일까? 문제의 답은 양질의 일자리 사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자리 참여자가 해당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낙엽 청소를 하는 사업에서 참여자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될 뿐이다. 반면, 낙엽 청소를 하는 모습에 대해 주민이 감사해 하고, 이 낙엽을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드는 데 이용을 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면 참여자들은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즉, 복지적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부가가치 생산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또한, KOICA의 해외개발원조 사업의 경우도 단순히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머물지 않고, 해외 봉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해 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각종 사회단체와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의 규모나 노동 강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인지 아닌지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 숫자를 셈하는 것보다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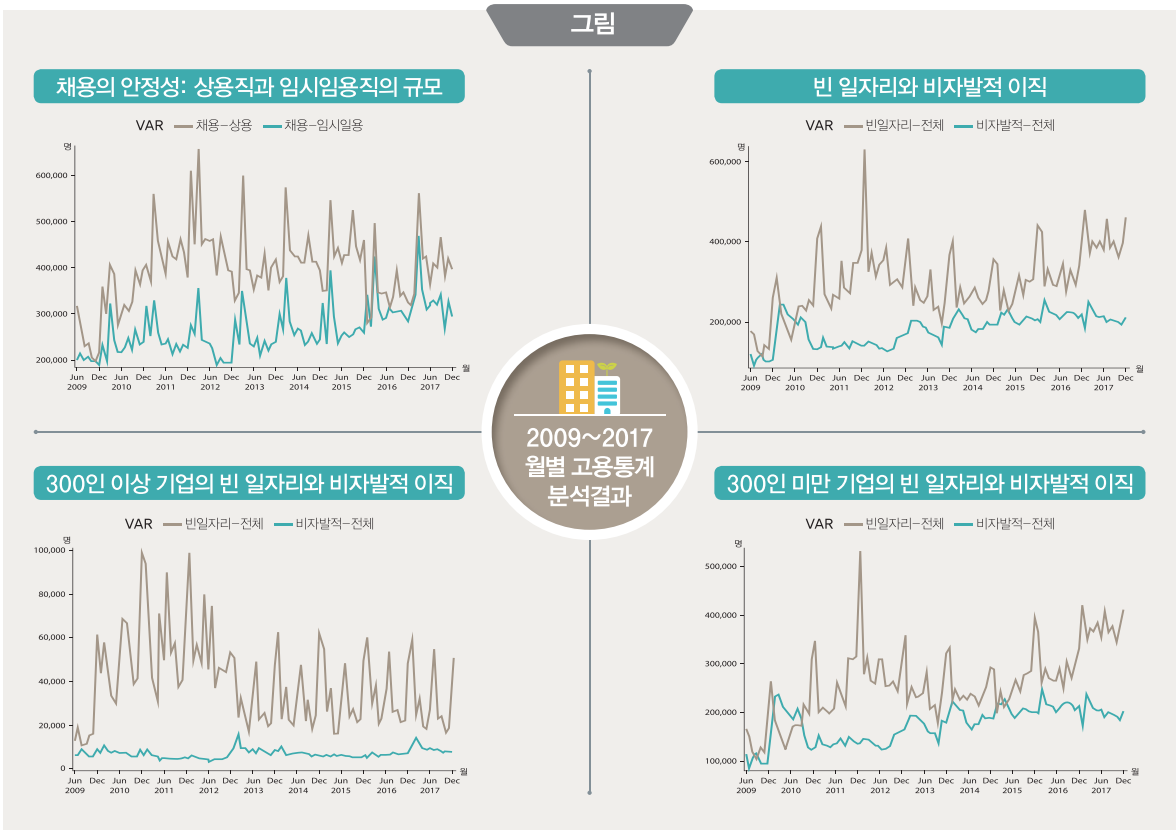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중앙/지방정부 수준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어떠한 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을 가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 · 반복 참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자리 참여자가 안정적인 고용시장으로 얼마나 진입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림〉은 고용노동부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월별 고용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상용직과 임시임용직 채용 규모의 추세를 비교해보면 임시임용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상용직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양자 간의 차이가 2016년 이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빈 일자리는 일정한 상황에서 비자발적 이직은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다. 비자발적 이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300인 이상 기업의 빈 일자리와 비자발적 이직은 줄어들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비자발적인 이직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정책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을 중소기업에 보전해주기보다는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우수 인재 유출을 막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 임금 보전과 비교해 볼 때 미래의 복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빈 일자리도 많다는 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합한 구인 정보 제공과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igerdream@hanyang.ac.kr

PUBLIC FINANCE COLUMN

신기술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외환위기 직후 급상승한 청년 실업률은 이후 7~8%대에 머물다가, 2014년 9.0%, 2015년 9.1%에서 2017년에는 9.9%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102만 8,000명, 구직 단념자도 48만 3,000명이다. 청년 실업자(15~29세)가 청년 10명 중 1명꼴로 늘었다.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까지 포함한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1]는 청년층이 22.7%로 전년도 22.1%보다 0.6%p 높아졌다.

향후 3~4년 동안 청년 고용시장이 인구 구조 문제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청년층 중 일자리 수요가 가장 많은 25~29세 인구는 2014년 326만 명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41만 명이 증가된다.

1 고용보조지표는 공식 실업률에서는 반영되지 못하는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여 고용시장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이용된다. 본문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보조지표3(=(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실업자+잠재 경제활동인구)÷확장 경제활동인구×100)을 이용하였다.

역대 정부 일자리 정책 실패 원인

역대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0번의 청년 고용 대책 발표와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과거 정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여 추진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에 몰두했다.

실패 원인은 첫째, 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자리 수에만 집중하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시적 일자리 늘리기와 취업지원정책에만 집중했다.

둘째,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했다.

셋째, 청년일자리정책이 독립적으로 시행돼 산업정책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성과를 낸 일자리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신기술 통한 일자리 창출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는 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일자리 2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 진보를 통하여 사람과 기계의 역할 변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 등의 향후 사회 경제적 변화가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회 요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세계경제포럼, 보스턴컨설팅, 가트너그룹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각 부문별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를 추정한 것이다.

사람과 기계의 역할 변화로 드론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드론의 클라우드 비행 기술은 산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대응과 농업 및 건설,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드론 활용이 많아질수록 이를 제어 운용하는 컴퓨팅 솔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루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 개발(R&D) 투자를 하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운송장비 업종에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 정보 분야 최고급 전문 인력 6,000명, SW전문 · 융합 인재 2만 명,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1만 명, 연구 산업계 일자리 1만 2,000개가 창출된다. 또한 3D 프린팅산업은 사물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스캐닝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도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3D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일자리 8,000개 창출된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결합과 관련된 가상현실 · 증강현실(AR) 분야는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 렌더링, 스캐닝, 콘텐츠 플랫폼 등과 관련된 8만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감성 컴퓨팅 기술로 사물인터넷은 사물 생성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사물인터넷 운영체제, 플랫폼 개발자 등 일자리 12만 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 분산처리 전문가, 서버 개발자,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일자리 1만 3,000개가 창출된다.

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 분야로, 스마트카와 관련해서 자율 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센서 개발자 및 수집된 도로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가 직업이 생겨난다. 부품과 센서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일자리 1만 4,000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일자리 1만 6,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지능화 인프라, 융합서비스, 맞춤형 헬스 케어,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업,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시티,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등 정보통신 기술(ICT)기반의 일자리 26만 개가 창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 · 보안 영역을 넘어 금융, 의료, 제조, 물류, 무역,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의 솔루션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12만 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2018년에 정부는 혁신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4대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그중 4차 산업과 관련된 AI, IoT, 빅데이터 등 핵심 · 융합 기술 개발 지원에 6,466억 원,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783억 원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과 함께, 신기술 관련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재정과 정보

통합화, 표준화, 정보화를 통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신뢰성 있는 재정 통계로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지원합니다

이슈포커스

미국 시카고시의 참여예산제도

e나라도움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재정사업

해외재정동향

미국의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대항해시대의 주인공, 스페인

미국 시카고시의 참여예산제도

박소영
現)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前)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thesoyoungp@gmail.com

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관한 수요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으며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증가시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Rio Grande do Sul)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40개 국가의 1,700개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이다(Cabannes, 2014). 각 국가들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처해있는 사회 ·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방정부에서 조례제정 등의 제도화 과정을 거쳐 도입 ·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1]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 및 해외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서 시카고시는 미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시작하였고 미국의 여러 시정부에서 시카고시의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도 시행 이후로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미국 시카고시의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가재정법상 국민 참여에 관한 근거'에 기초하여 시행령에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2018년 예산안에 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 사업(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총 422억 원을 반영하도록 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1.26.).

2 2009년부터 미국과 캐나다 주민들이 지역 예산 사용 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각 도시의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지원, 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참여예산제도 개요

미국에서의 참여예산제도는 예산 권한을 갖는 시의회 의원들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시민 단체 및 학계 등 비정부기구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카고시는 2009년 시의원인 조 무어(Joe Moore)에 의해 49지구에서 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도되었다. 각 지구별 시의원에게 지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당된 지출 중 자본 예산(capital funds)의 편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대표자 회의(Community Representative Meetings)에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여, 그 사업안에 대해 16세 이상의 주민이 투표한 결과에 따라 자본지출 일부(약 100만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2017년에는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구가 12개의 지역구로 확대되었고, 약 1만 3,000명의 시카고 주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약 1,800만 달러의 자본지출을 결정하였다(http://www.pbchicago.org). 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프로젝트 PBP(Participatory Budgeting Project)[2]와 일리노이 대학 관련 기구인 GCI(the Great Cities Institute)에서 참여예산제도 운영(기술적 지원,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요약 등)을 도와주고 있다.

시카고시 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사업을 제안, 심사, 투표하는 과정에서 사업 및 예산에 관한 정보와 예산 배정 과정, 사업 선정 결과 등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는 연도별, 지역구별 사업명과 주소 및 사업에 배정된 예산과 사업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위원회를 통해 제안은 되었으나 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참여예산 과정을 통한 예산 배정을 보면 대부분 거리보수 및 도로관리 분야에서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비중, 특히 편의 시설 설치 관련 사업의 비중이 초기(2012~2013년)에는 많았으나, 현재는 시민안전(가로등, 횡단보도 사인)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산 배정 사업

2016~2017	2012~2013
• Street facing and sidewalk and alley repair($670,000)	• Street facing and sidewalk and alley repair($700,000)
• Park benches($40,000)	• Cobblestone Street restoration($150,000)
• Extension of Pratt bike lane($30,000)	• Pedestrian Safety Study($30,000)
• New street lights($212,000)	• Trees and water fountain in a public park($29,800)
• Countdown crosswalk sign($20,000)	• Bike lanes($75,000)

자료: www.pbchicago.org/49th-ward

사업의 시행 장소 지도

자료: www.pbchicago.org/49th-ward

참여예산제도 운영기구

참여예산 홈페이지에는 각 구별 인구 및 사회경제 정보, 투표 일정, 참여예산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사업의 시행 장소와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Winning Projects Map)를 제공한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과거에 어떠한 사업들이 제안되었고, 현재에는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들은 다양한 운영기구를 통해 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한다. 지역구 내에서 시의원이 주도하는 지역위원회(Neighborhood Assemblies), 지역 주민이 이끌어가는 지역대표자 회의(Community Representative Meetings)와 참여예산제도를 기획하는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민 단체에 자원하여 봉사자(Volunteer)로서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01 지역위원회(Neighborhood Assemblies)

지역구별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는 참여예산 과정 중 가장 초기에 주민이 필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구이다.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구 시의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참여 인원은 유동적이며 평균 10~50명 정도 참여하며 2013년 기준으로 19개 지역구에서 698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지역위원회에서 지역대표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 위원들을 선출한다.

02 지역대표자 회의(Community Representative Mee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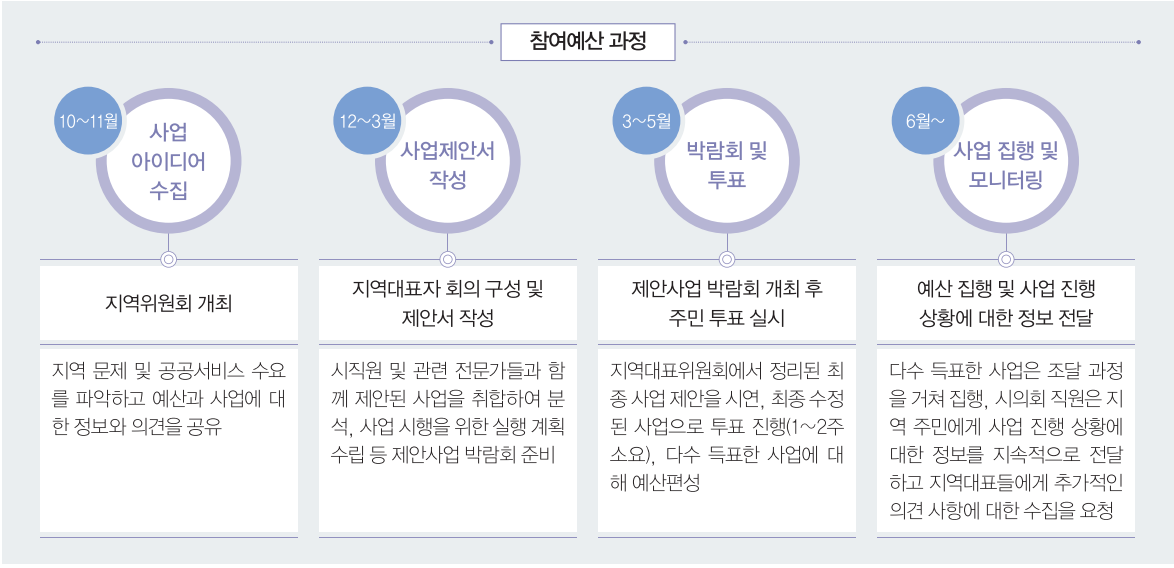
지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예산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규모는 유동적이다. 대표자 회의에서 지역 문제와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아이디어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역대표 위원들은 사업 제안서를 만들고, 발표를 준비하는 등 제안사업 박람회를 준비한다. 또한 사업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참여예산 과정을 평가하는 데에도 참여한다.

03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참여예산제도의 확산을 위해 2012년에 구성되었고, 의회직원, 시의회 및 지역 주민 대표, 지역 단체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이슈와 서비스 수요 등을 근거로 하여 규범서(Rule book)를 작성한다. 또한 참여주의 예산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등 예산 과정에 대해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시카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절차

시카고시의 참여예산제도는 연방정부 예산주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미국은 10월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며 이에 맞추어서 시카고시의 참여예산 활동도 10월에 시작되고 다음해인 봄에 종료되어 약 8개월가량 소요된다.



주: GCI. (2015). Building a People's Budget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01 지역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지역위원회에서 각 구별 주민들은 첫째,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둘째, 사업 지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셋째, 자발적으로 지역대표가 되어 지역대표자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한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위원회를 통해 직접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역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 및 이민자 등 소수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한 특별 지역위원회를 적어도 두 개는 개최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은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사용가능한 자본예산 및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한다.

02 지역대표자 회의 구성 및 제안서 작성

지역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들 가운데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자 회의를 구성한다. 약 5개월에 걸쳐 지역대표자 회의가 진행되는데 대표 위원, 시의원 및 시의회 직원이 참여하여 제안된 사업들을 검토 후 일부 사업을 선택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최종 투표 대상으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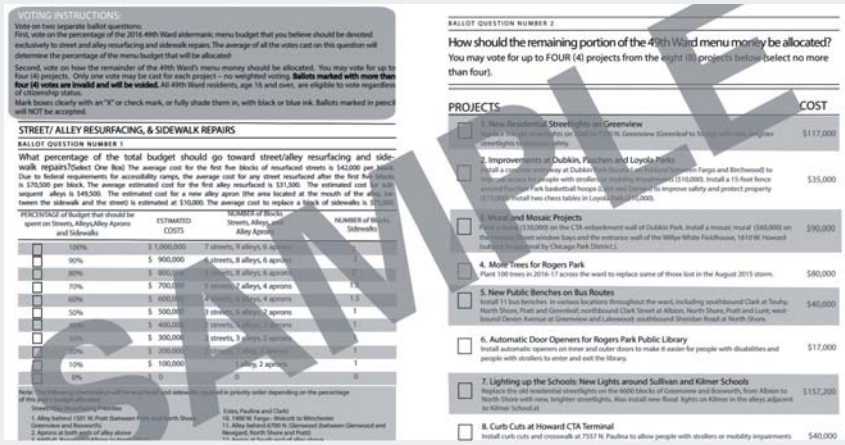
지역대표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샵을 진행한다. 워크샵에서는 예산, 사업개발, 의사결정 과정, 주요 사업영역 등에 대해 다루어진다. 시민 단체 전문가, 프로젝트 담당자, 조정위원회 등이 워크샵을 주관하며 대표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기술적 자문도 수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담당하여 예산 교육(Outreach Training)도 실시된다.

03 제안사업 박람회(Project Expo)

지역대표자 회의를 통한 제안사업 심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구체화된 제안사업 계획을 시연한다. 대표위원회는 제안사업 발표를 준비하는 등 제안사업 박람회(Project Expo)를 준비하며 포스터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 소개, 사업 위치, 유사 사업 소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며 주민투표를 위한 최종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각 지역구는 1~3번 정도의 제안사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PBP와 GCI가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해주며 제안사업 발표 준비를 위해 지역대표 위원을 도와준다.

3 이민자, 저소득계층, 유색인종 등은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높다(PBChicago, 2015).

주민 투표 샘플



자료: www.pbchicago.org/49th-ward

04 주민 투표(Community Voting)의 실시

제안사업 박람회를 거쳐 최종 조율된 사업 계획안에 대한 주민 투표는 5월에 실시한다.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최소 연령은 지역구마다 다를 수 있다. 2014년도 투표에서는 3개 구에서 37개의 제안사업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고 2,882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3]를 위해 독려된다.

05 프로젝트 실행 및 모니터링

2014년 투표 결과 3개구에서 15개의 지역사업이 선정되었고 이는 약 300만 달러에 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예산의 집행을 위해 시의회가 시예산관리처에 제출한다. 시의회 직원은 사업 집행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유한다. 조정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과정과 선정 사업의 집행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PBP, GCI 등을 주축으로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SAMPLE

참고 문헌

- Great Cities Institute. (2015). Building a People's Budget.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Participatory Budgeting Chicago. (2015). Participatory Budgeting Chicago Rulebook.
- Cabannes, Y. (2014). Participatory Budgeting to provision and management of basic services: Municipal practices and evidence from the field. IIED Working Paper. IIED, London.

e나라도움 운영 성과 및 발전 방향

e나라도움 운영단

국고보조금 알아보기

"국고보조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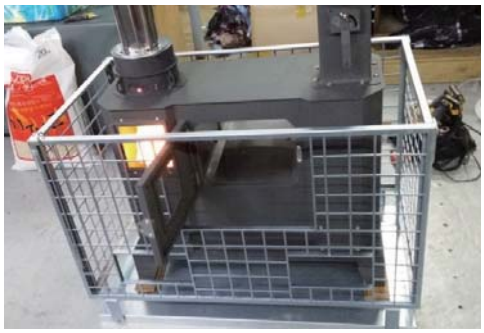
자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복지 분야 서비스
-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도로 · 항만 등 건설 사업
-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 실시:** 재해 복구 사업
- **신규 사업의 보급 및 장려:** 험오시설 또는 주민 기피시설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 **국민 편리를 위한 사무 위탁:** 국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경비 부담
-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 사업의 균형 유지

국고보조금은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지방정부 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성격에 따라 그 목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 공공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공공재를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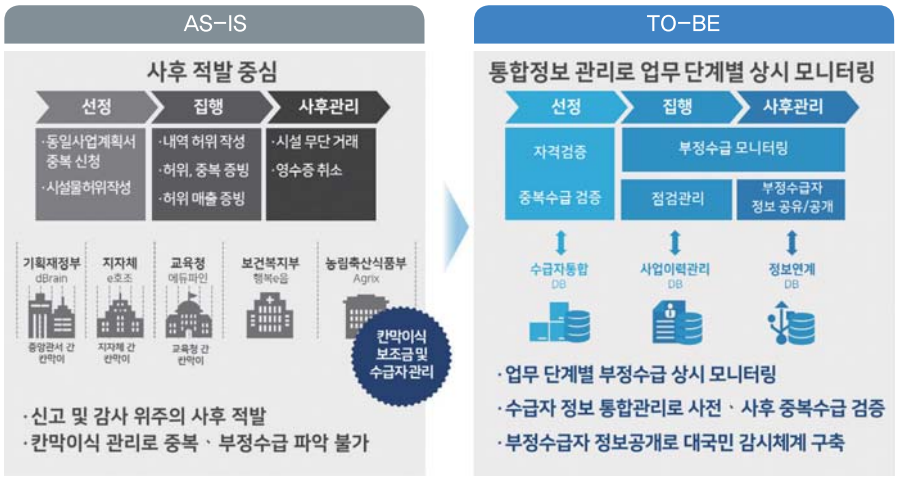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촌이 새로 구입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고(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지난해 시골 아버님 댁에 설치해 드린 목재 보일러에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산림청,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e나라도움 시스템 개요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 교부 · 집행 · 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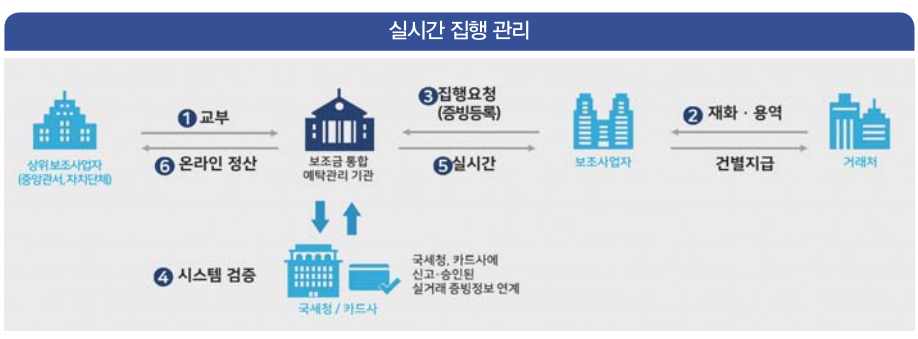
그동안 국고보조금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고, 더불어 더 빨리 늘어나는 부정 수급 적발 사례에 의해 나라 살림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중복 ·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e나라도움'의 구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구축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정보에 대한 부처 간, 사업 간, 시스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무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정보, 보조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를 통해 부처별, 기관별 정보를 통합하였습니다.

부처 간, 사업 간, 시스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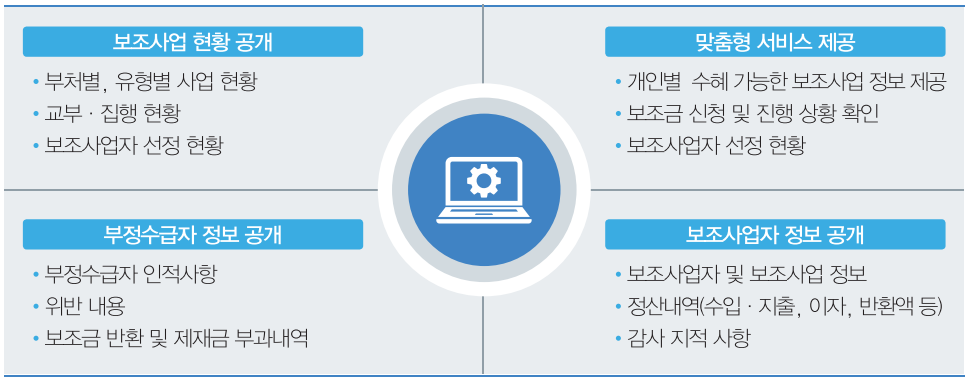


둘째, 보조금 예탁계좌를 도입하고 실시간 증빙에 의한 집행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보조금의 자금 흐름을 중앙 부처의 교부 시점부터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 끊김 없이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꼬리표'가 달리면서 사용 단계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보조금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예탁계좌 및 실시간 집행 관리를 통한 자금 흐름 추적



셋째, 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국민 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을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정작용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업무 처리를 수행하게 하였고 보조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구축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의해 '중복 · 부정 수급 방지', '보조금 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나라도움 도입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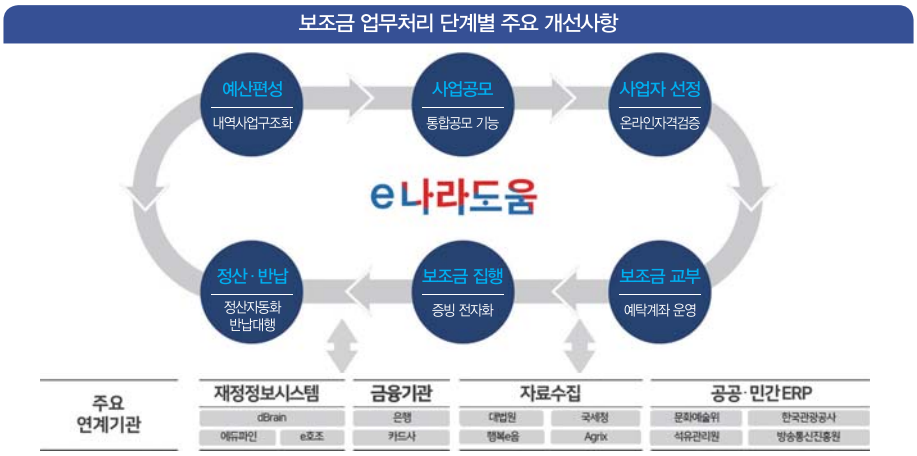
중복·부정 수급방지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 방지
업무 효율화	전자적 처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화로 보조금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	개인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현황, 성과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

e나라도움 운영 주요성과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1월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집행 기능 등에 대해 1차 개통하였고 2017년 7월 보조금 정산, 중복·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e나라도움이 개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고 향후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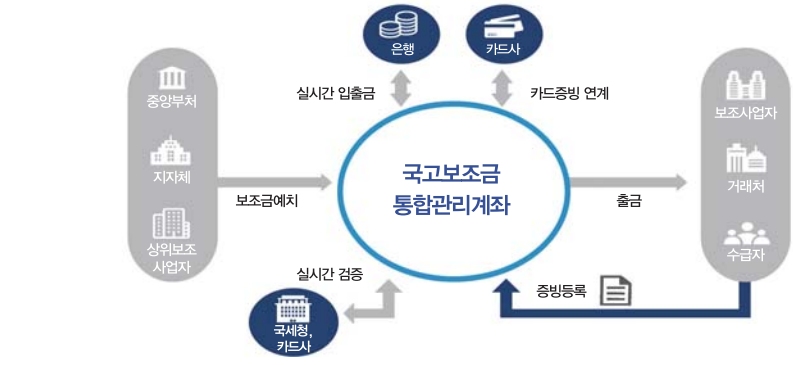
첫째, 예산편성, 사업 공모·선정, 보조금 교부, 집행 등 모든 보조금 업무의 온라인화를 통해 보조사업 관련 담당자(중앙부처, 지자체, 보조사업자 등)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로, 자격 검증용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 온라인으로 자격 검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금 집행 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카드 전표를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집행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업무 효율화



둘째, 국고보조금 사업 정보, 집행 실적 등의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여 보조사업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축 전에는 '대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큰 덩어리의 세부 사업 단위의 집행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 이후 '캐릭터산업 육성'이라는 내역사업 단위, 더 나아가 '국산 캐릭터 개발지원'이라는 보조사업, 그 하위의 '우수 국산 캐릭터 상품 개발 지원'이라는 보조사업의 집행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



셋째, 국고보조금 통합예탁 관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었고 국고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자 계좌에 넣어주고 알아서 사용한 뒤 사업이 끝난 후에야, 그것도 수작업으로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영수증을 여러 사업에 첨부하기도 하는 등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e나라도움 구축 이후에는 보조금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을 예치하고, 사업자가 정상적 집행을 증빙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세청 전자 세금계산서나 금융사의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내역을 온라인으로 증빙할 수 있으니 영수증 중복 사용이나 허위 증빙 사용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국민 국고보조금 정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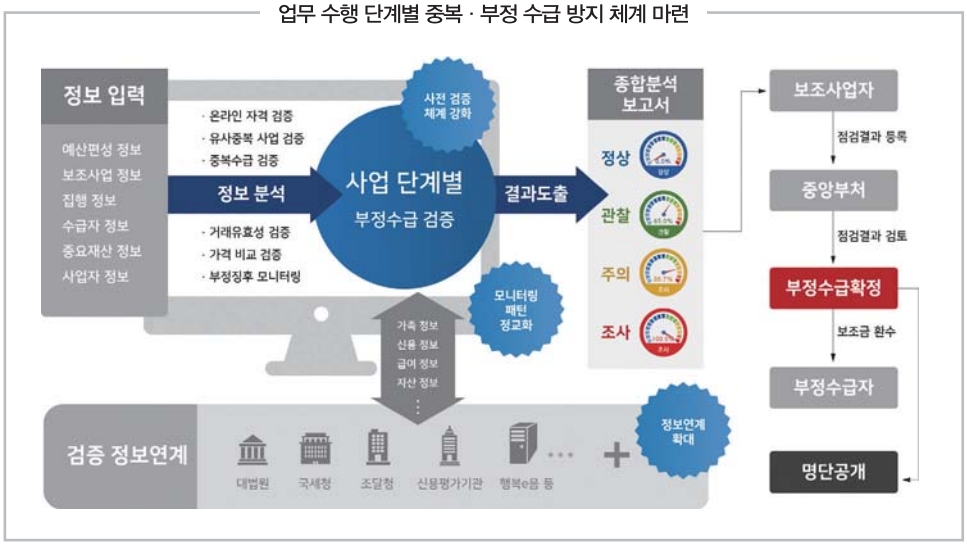
2017년 한해 예탁계좌를 통해 13.2조 원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보조금 전용 카드에 의한 전자증빙 기반 집행 건이 110만 건에 달하였습니다.

넷째, 보조사업 전 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만 건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현황, 집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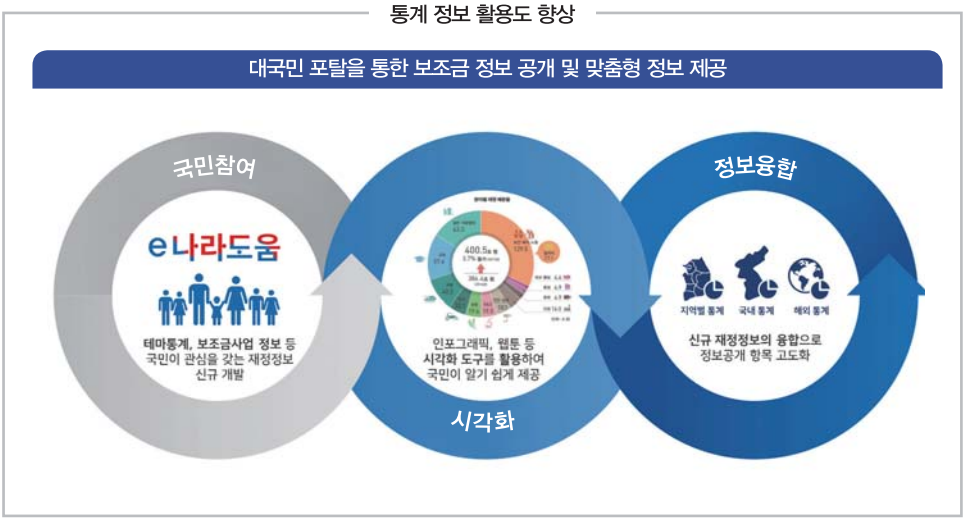
이러한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e나라도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단계별 중복 · 부정 수급 방지 체계 마련



먼저, e나라도움 시스템의 핵심 구축 목표인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업무 수행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축적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검증 기초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각 부처, 보조사업자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부정 수급 방지의 효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정보 활용도 향상



대국민 포탈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에 대해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information graphics), 웹툰(webtoon) 등의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정보에 지역별 통계, 국내 재정 정보, 해외 통계 등과 융합하여 정책 결정, 보조금 효과성 산출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장애 예방 점검, 장애 처리 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무장애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정 운영을 기반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용자 의견 수렴으로 기능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적용하여 사용자분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막 구축 첫돌이 지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많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고민하도록 할 것이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 마인드에서 벗어나 '서비스' 마인드로 전환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재정통계

총세입·총세출

2017년 11월 중 총수입은 26.7조 원, 총지출은 24.8조 원이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99.2조 원으로 진도율은 94.4%이고 전년 동기 대비 26.7조 원 증가(진도율 1.5%p 상승)하였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70.0조 원으로 진도율은 90.2%이고 전년 동기 대비 18.5조 원 증가(진도율 2.0%p 상승)하였다.

표 1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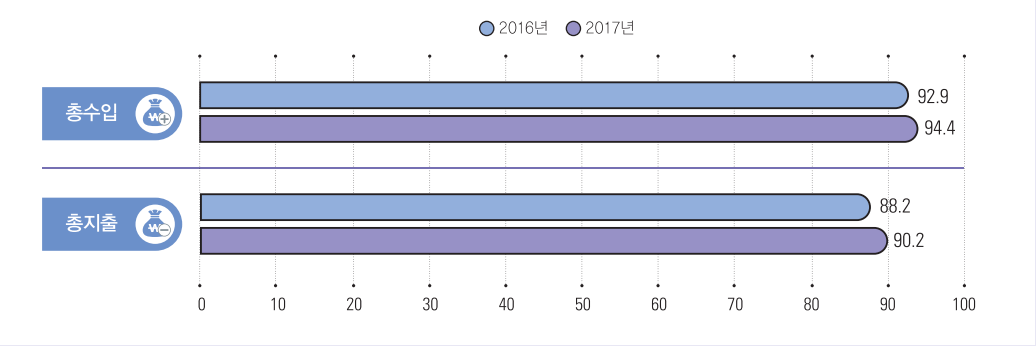
20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수입 (진도율)	40.2	65.9	103.4	150.8	179.8	207.1	249.0	280.3	309.9	348.2	372.5 (92.9)	401.8
총지출 (진도율)	30.9	68.0	117.5	146.4	175.4	215.1	241.0	264.5	301.7	330.9	351.5 (88.2)	384.9
통합재정수지	9.4	-2.1	-14.1	4.2	4.5	-8.1	8.1	15.8	8.2	17.3	21.0	16.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9	3.6	9.2	13.5	16.9	20.5	23.5	27.3	30.9	33.4	35.7	39.6
관리재정수지	7.5	-5.7	-23.4	-9.2	-12.5	-28.5	-15.4	-11.6	-22.7	-16.1	-14.7	-22.7

201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수입 (진도율)	47.2	73.3	113.4	163.1	196.0	223.2	267.2	299.4	329.6	372.4	399.2 (94.4)	-
총지출 (진도율)	32.3	69.3	117.3	154.0	184.8	225.4	251.1	282.0	317.0	345.2	370.0 (90.2)	-
통합재정수지	14.9	4.0	-3.9	9.1	11.3	-2.2	16.1	17.4	12.7	27.2	29.2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1	5.1	10.2	14.0	18.3	21.9	24.4	27.6	31.2	34.6	37.9	-
관리재정수지	12.7	-1.1	-14.1	-5.0	-7.0	-24.1	-8.3	-10.2	-18.5	-7.4	-8.8	-

주: 구성 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그림 1 총수입, 총지출 1~11월 진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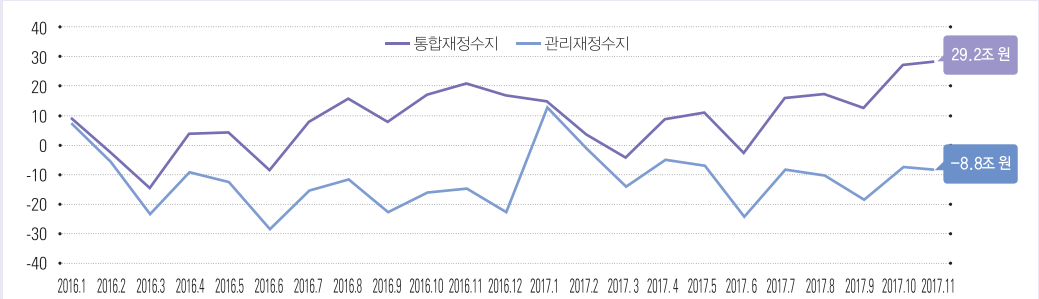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2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37.9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2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6.0조 원 개선되었다.

그림 2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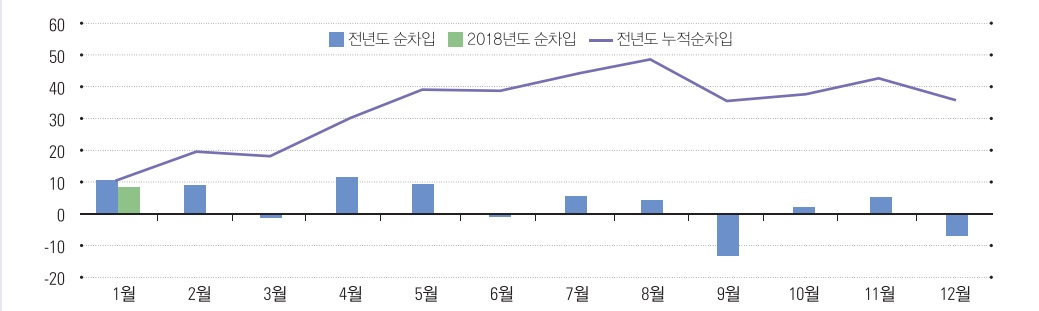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채[1]

2018년 1월 말 기준 국채는 발행 10.1조 원, 상환 2.1조 원으로 전월 대비 8조 원 증가했다. 전년 1월은 발행 11.6조 원, 상환 0.8조 원으로 올해 1월은 발행량은 감소하고 상환이 증가했다. 2018년 1월 누적 국채는 631.3조 원이다.

그림 3 월별 순차입 및 누계

(단위: 조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순차입	10.6	8.9	−1.3	11.4	9.3	−0.7	5.6	4.5	−12.9	2.2	5.1	−6.9
	누계	10.6	19.5	18.2	30.0	38.9	38.4	43.9	48.4	35.4	37.7	42.7	35.8
2018	순차입	8.0	–	–	–	–	–	–	–	–	–	–	–
	누계	8.0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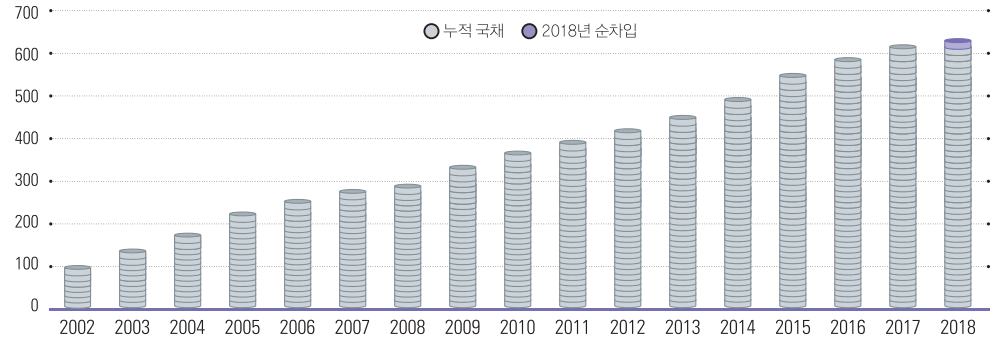
주: 항목별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2018년 3월호

1 국채는 국고채권,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을 합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며 2017년 12월 국가채무 현황은 4월에 결산 자료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림 4 연도별 국채 누적 추이

(단위: 조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채 누적	103.1	140.6	182.9	229.0	264.3	280.5	289.4	337.5	367.2	397.1	420.0	459.5	498.1	551.5	587.5	623.3	631.3

주: 2018년은 2018년 1월 기준 누적 국채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2018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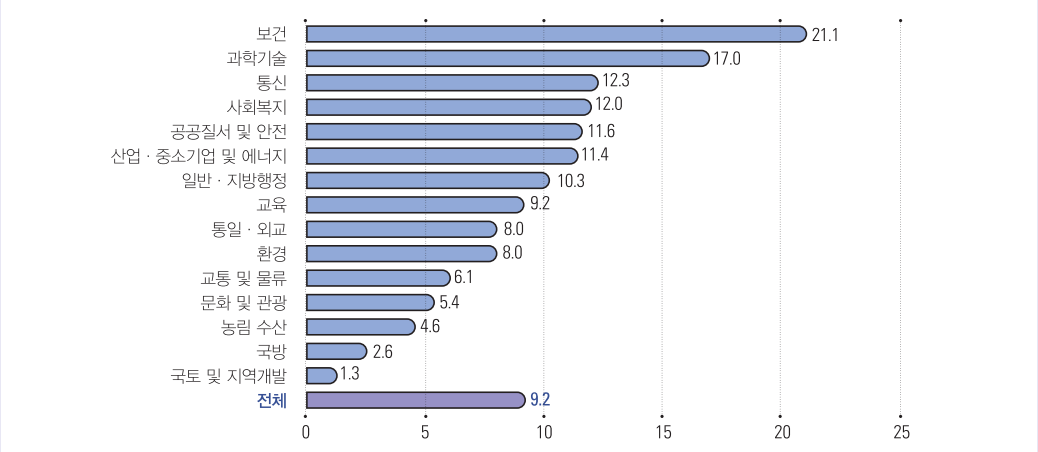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 실적

2018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은 235.6조 원이며, 1월 집행액은 21.7조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9.2% 집행하였다.

1월 기준 월간 집행율은 보건(21.1%), 과학기술(17.0%), 통신(12.3%), 사회복지(12.0%), 공공질서 및 안전(11.6%),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11.4%) 분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림 수산(4.6%), 국방(2.6%), 국토 및 지역개발(1.3%) 분야의 월간 집행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5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2018년 1월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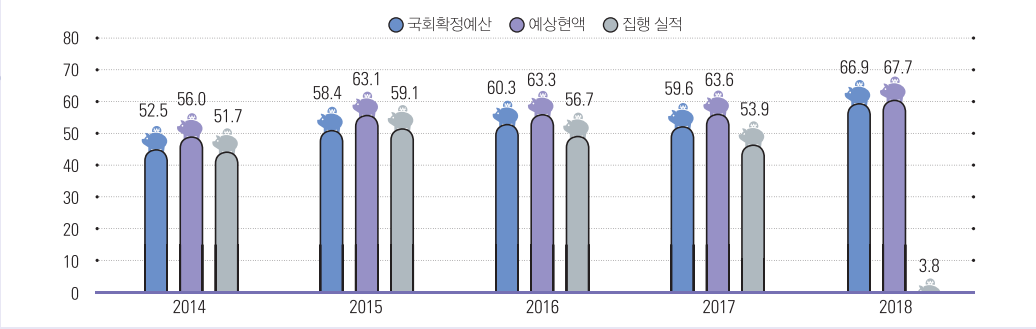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8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66.9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조 원에 비해 약 7.3조 원 증가하였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예산현액은 67.7조 원이며, 1월 누적 실집행실적은 3.8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5.6% 집행되었다.

그림 6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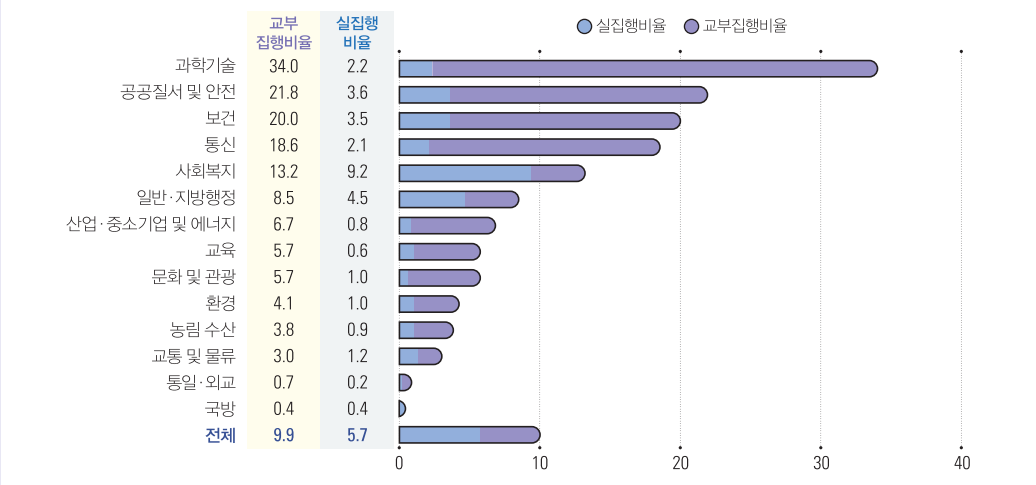


주: 2018년 집행 실적은 1월 누적 '실집행금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분야별로 사회복지(3조 4,866억 원), 농림수산(782억 원), 보건(528억 원), 환경(455억 원), 문화 및 관광(426억 원) 분야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실집행되었다. 교부집행비율은 과학기술분야가 34.0%로 가장 높지만, 실집행비율은 사회복지분야가 9.2%로 가장 높다.

그림 7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2018년 1월 기준)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osims.go.kr)

2. 테마 통계: 출자금

출자금이란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적인 급부를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출자금의 특성, 규모, 연도별 현물출자 내역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융자, 출연, 출자, 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출자'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출자는 구체적인 용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출자 수단에 따라서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된다.

정부 예산 지원 방식 중 하나인 융자, 출연과 출자를 비교하면, 융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법인 및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정부 자산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출자와 유사하지만, 융자는 만기 시 원금 상환과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반면 출자는 투자와 유사하여 만기가 없고 배당과 지분 매각의 형태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출연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 기관, 공단 등 정부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출연과 출자 모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출연은 배당과 지분 매각 등의 형태로 지출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자와 차이가 있다.

표 1 출자, 출연, 융자의 개념 · 특징 비교

	출자	출연	융자
개념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지급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을 지원	정책 목표를 위해 공공자금을 특정 법인 및 개인에게 빌려줌
특징	배당과 지분 매각의 형태로 수입을 얻음	상환 의무가 없음	만기 시 원금 상환과 대출이자를 받음
개별법 근거	필요	필요	불필요
구체적 용도 지정	미지정	미지정	지정

출자금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4조 원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7년에 5조 4,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소관별 출자 규모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전체 출자금 중 평균 7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지출 대비 출자금 비율은 약 1%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2 출자금 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억 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42,189	39,370	40,727	43,883	54,078	53,575
국토교통부	28,640	28,813	30,901	37,819	49,301	45,081
지식경제부	9,716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2,000
산업통상자원부	–	5,974	3,725	3,082	1,517	–
금융위원회	1,800	300	1,300	1,200	650	1,900
해양수산부	–	–	–	–	–	1,700
문화체육관광부	400	300	960	760	930	910
산업통상자원부	–	–	–	–	–	850
기획재정부	200	1,300	400	–	–	–
농림축산식품부	758	735	650	450	430	300
해양수산부	–	100	100	200	350	–
중소기업청	500	1,000	1,600	–	300	–
미래창조과학부	–	523	621	372	280	–
보건복지부	–	300	300	–	–	–
교육부	–	–	–	–	120	279
특허청	–	–	170	–	–	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150
방송통신위원회	150	–	–	–	–	–
환경부	–	–	–	–	200	130
고용노동부	25	25	–	–	–	75
총지출 대비 출자금 비율(%)	1.2	1.1	1.1	1.1	1.4	1.2

주: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직 개편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연도별 현물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연도별로 대표적인 현물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현물출자액은 국토해양부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출자한 3,516억 원과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총 1조 6,50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현물출자액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 수도시설관리권 907억 원이다. 2011년 현물출자액은 총 2조 353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 7,098억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 8,793억 원을 출자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분야 수출 지원 여력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적정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으로 3,800억 원을 지출하였다. 2015년 현물출자명세서상의 현물출자액은 총 3조 8,692억 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제60조에 따라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정 BIS비율 유지를 위해 출자한 3조 1,500억 원과 국토교통부가 수서 고속철도 개통을 대비하여 신규 고속열차 22편에 대해서 현물출자한 7,19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의 현물출자명세서상 현물출자액은 없다.

표 3 연도별 현물출자 내역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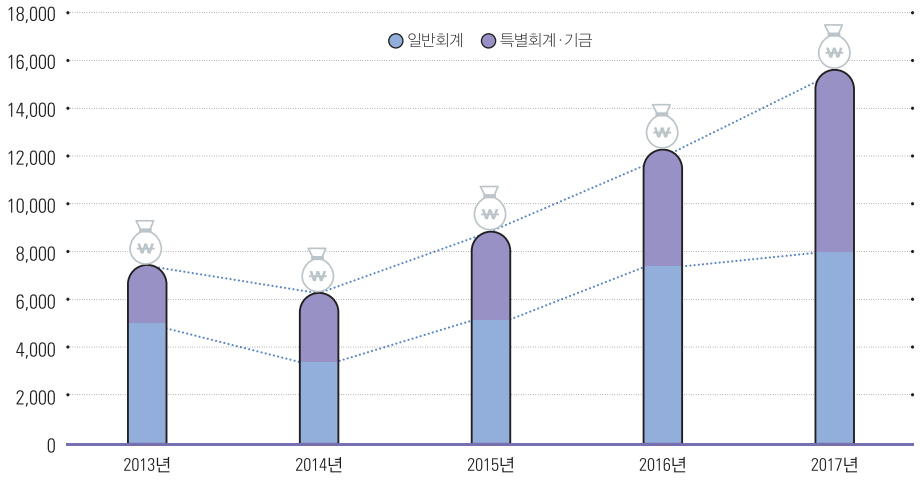
연도	출자기관	출자대상기관	출자재산	출자가액
2008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토지, 건물, 공작물	3,516
	기획재정부	한국철도공사	토지	2
		중소기업은행	유가증권	5,000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6,500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5,000
2009	국토해양부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타	13,114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17,396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5,000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타	135,886
2010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무체재산	907
2011	기획재정부	부산항만공사	토지, 건물, 공작물	1,743
		한국수자원공사	무체재산	121
		여수광양항만공사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8,222
		울산항만공사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2,857
		한국전력공사	공작물	106
	국토해양부	여수광양항만공사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7,302
		울산항만공사	무체재산	3
2012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무체재산	8,793
2013	기획재정부	한국공항공사	토지	750
		한국수자원공사	기타	167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토지	1,856
2014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3,800
2015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은행	유가증권	20,000
		한국수출입은행	유가증권	1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유가증권	1,500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기계기구	7,192
2016	–	–	–	–

자료: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 각 연도별 자료

정부가 출자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배당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다. 배당성향(propensity to dividend)이란 회사가 주주에게 당기순이익 중 얼마나 배당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당기순이익 중 배당성향이 높으면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많이 돌려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다. 〈그림 1〉은 2017년 정부 배당 수입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출자한 기관 36개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발행한 23개 기관에 대한 총 정부 배당 수입은 1조 5,562억 원이며, 전년대비 약 27.4% 증가하였다. 2017년 평균 배당성향은 31.89%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배당성향을 40%로 단기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림 1 연도별 정부 배당 수입 실적

(단위: 억 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실적	증감(%)
일반회계	4,930	3,291	5,065	7,323	7,888	565(7.7)
특별회계·기금	2,491	2,888	3,704	4,890	7,674	2,784(56.9)
합계	7,421	6,179	8,769	12,213	15,562	3,349(27.4)

주 1) 2017년 일반회계 배당 실시 기관은 17개 기관(공동출자 기관 7개 포함)
2) 2017년 특별회계·기금 배당실시기관은 13개 기관(공동출자 기관 7개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5.19.)

이달의 이슈키워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재정사업

김상기
재정통계분석팀 연구원
sgkim@kpf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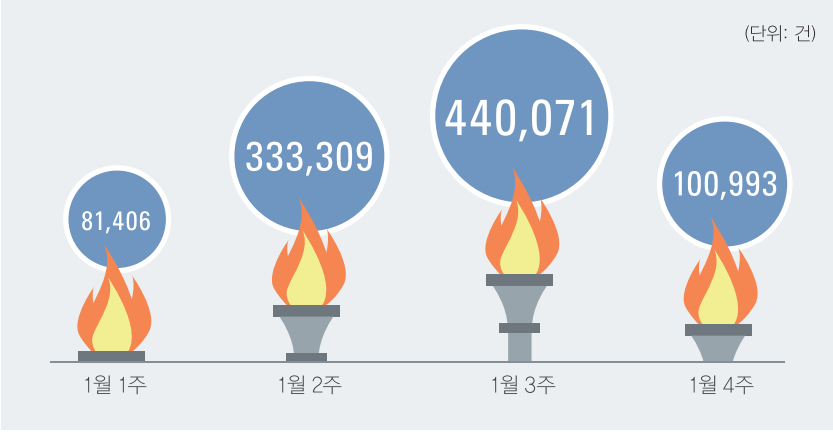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었다. 강원도 평창군 · 강릉시 · 정선군에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3월 9일부터 18까지 10일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 정책여론수렴시스템(2018.2.2.), 수집기간: 2018.1.1.~1.31.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정투자

정부는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지구촌 축제의 장이 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경기장을 건설하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에 13.7조 원(국비 7.3조 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언급량 추이



자료: 정책여론수렴시스템(2018.2.2.), 수집기간: 2018.1.1.~1.31.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장, 교통망 등 시설 건설

정부는 평창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8조 6,291억 원(국비 6조 2,010억 원)을 투자하여 기간 교통망을 확충하였다. 평창올림픽의 핵심 교통망으로 지난 12월 22일 개통된 경강선 KTX(서울~강릉)는 청량리역에서는 1시간 26분, 서울역에서는 1시간 54분 만에 강릉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대회 기간 중 서울역 출발 강릉역행 첫차는 오전 6시(청량리역 출발은 오전 6시 40분), 강릉역 출발 서울역행 막차는 23시 10분(청량리역행은 1시 20분)으로, 숙박 부담 없이 경기 관람이 가능토록 하였다. 고속철도 외에도,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도 개통하여, 수도권에서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까지 기존 거리보다 15km 단축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조 3,070억 원(국비 1조 975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장, 내부 교통망 등 대회 필수 시설도 건설하였다. 국제적 수준의 개 · 폐회식장(올림픽 스타디움)과 12개 경기장(신설 6개, 보수 6개)을 건설하고, 개 · 폐회식과 설상 경기는 평창에서, 빙상 경기는 강릉에서, 알파인스키 활강 경기는 정선에서 진행하였다. 더불어 17개소의 경기장 진입 도로도 개설하여 경기장 접근 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선수단과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 예술을 세계인들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구현함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올림픽[1]을 지원하였다(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사업, 1,013억 원(국비 731억 원)). 평창 문화올림픽은 크게 대회 이전과 대회 기간으로 구분하여, 대회 이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림픽 분위기 조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행사를 열었고, 대회 기간에는 평창 올림픽플라자 등 개최 도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평창올림픽을 찾은 관광객에게 강원도만의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써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였다(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사업, 926억 원(국비 463억 원)). 소설가 이효석 생가 일대를 효석문화예술촌으로 지정하여, 메밀국수 등 소설 속 장터거리를 재현하였고 1920~30년대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던문학체험몰과 문학창작몰도 조성하였다. 지역문화 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하였다. 세계명작동화 테마로 만들어진 눈조각들을 보고 눈썰매 · 얼음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대관령 눈꽃축제(www.snowfestival.net) 외에도, 송어 맨손잡기, 얼음낚시, 겨울레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평창 송어축제(www.festival700.or.kr), 얼음축구대회에 참여하고 정선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정선 고드름축제(www.icefestival.kr) 등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ICT 체험관 운영 등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평창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진출 등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였다(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사업, 265억 원(전액 국비)). 평창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개인 방송 서비스 소셜 캐스트(2018socialcast.kr)를 구축 · 운영하여 올림픽 붐업을 지원하였고, ICT 체험관을 운영하여 5가지의 첨단 기술(5세대 이동통신(5G), 사물 인터넷(IoT), 초고화질 영상(UHD), 인공지능(AI), 가상 현실(VR))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ICT 체험관에서는 AI 로봇 '퓨로'에게 통역 및 안내를 제공받거나, UHD 체험스튜디오로 방송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VR 시뮬레이터로 봅슬레이 · 스노보드 · 롤러코스트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었다. 또한 강릉 월화거리를 IoT Street로 조성하여, 건물 벽면을 전시 공간처럼 활용하는 스마트 파사드, 가상 현실로 주변 맛집을 안내 받을 수 있는 IoT 파노라마 등 다양한 IoT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1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제39조(Cultural Programme)에는 문화 프로그램을 규정하여 문화올림픽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
U.S. President's Budget FY2019

박정수
재정운영지원팀 부연구위원
mymajesty@kpfis.kr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을 지난 2월 12일 발표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9월 30일까지이며, 대통령 예산안은 1월 첫 번째 월요일에서 2월 첫 번째 월요일 사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9년도 예산은 2월 5일까지 송부해야 했으나 새 예산안에 적용할 지출 한도를 규율하는 2018년도 양당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이 2월 9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정보다 늦게 송부되었다.
2019년도 예산은 국방, 보훈, 사회기반시설 분야 투자, 마약 관련 프로그램의 증액이 이루어지며, 의무지출 감축 및 국방 제외 분야 재량지출 감축도 추진된다.

경제 전망

관리예산처는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3.0%, 3.2%로, 그리고 2024년까지 3.0%로 전망했다. 이는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등 타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이다. 의회예산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률이 둔화되고(2.2% → 1.4%) 장기적으로는 1.9%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리예산처의 성장률 전망이 의회예산처보다 높은 이유는 세율 인하,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표 1 2019년도 예산안 경제 전망 전년 대비 및 타기관 예측과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명목 GDP	'19년도 예산안	19,372	20,262	21,263	22,345	23,482	24,672	25,923	27,234	28,598	30,001	31,461	32,991
	'18년도 예산안	19,419	20,291	21,253	22,313	23,442	24,628	25,874	27,183	28,558	30,003	31,522	–
	의회예산처	19,310	20,118	20,847	21,566	22,378	23,262	24,186	25,150	26,150	27,191	28,273	–
	블루칩주)	19,351	20,105	20,950	21,830	22,725	23,657	24,626	25,661	26,739	27,862	29,032	30,251
실질 GDP 성장률	'19년도 예산안	2.2	3.0	3.2	3.1	3.0	3.0	3.0	3.0	2.9	2.8	2.8	2.8
	'18년도 예산안	2.3	2.4	2.7	2.9	3.0	3.0	3.0	3.0	3.0	3.0	3.0	–
	의회예산처	2.1	2.2	1.7	1.4	1.7	1.9	1.9	1.9	1.9	1.9	1.9	–
	블루칩	2.2	2.4	2.1	2.1	2.0	2.0	2.1	2.1	2.1	2.1	2.1	2.1

주: 민간 Aspen사에서 미국의 주요 경제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함
자료: OMB, An American Budget–President's Budget FY2019, 2018.2.12.
OMB,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7.5.23.

재정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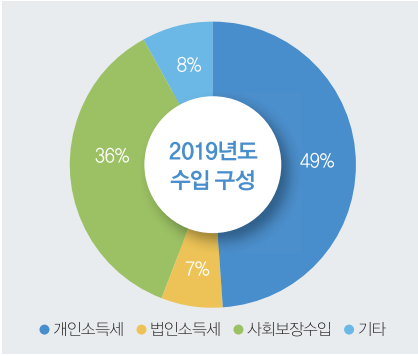
지난 2017년 12월 20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따라[1] 총 수입 전망은 2018년도 대통령 예산안에 비해 낮아진다. 개정 세율은 2018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올해(2018년도)의 실적 전망도 예산안 대비 3,139억 달러(8.6%) 낮아진 3조 3,404억 달러로 수정되었다. 2019년도 세입은 개인소득세 49%, 법인소득세 7%, 사회보장수입 36%, 기타 8%로 구성된다. 세법 개정의 영향에 따라 2018년도 전망과 비교해 개인소득세(−12.7%), 법인소득세(−40.0%)가 크게 감소한다.

표 2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의 총 수입과 2018년도 예산안과의 비교

(단위: 십억 달러, %)

	'18년도 예산안		'19년도 예산안		증감률	
	2018	2019 (A)	2018 (B)	2019 (C)	전년 전망 대비 (C−A)/A	전년 실적 대비 (C−B)/B
개인소득세	1,836.1	1,935.3	1,660.1	1,687.7	−12.7	1.7
법인소득세	354.9	374.8	217.6	225.3	−40.0	3.5
사회보장수입주)	1,224.3	1,277.0	1,169.7	1,237.6	1.7	5.8
기타	239.0	226.6	292.9	271.6	−5.2	−7.3
계	3,654.3	3,813.7	3,340.4	3,422.3	−10.2	2.5

주: Social insurance and retirement receipts
자료: OMB, An American Budget–President's Budget FY2019, 2018.2.12.
OMB, Fiscal Year 2018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7.5.23.



1 트럼프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였다. 해당 개정은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8년도 재정수입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각각 50.2%→49.7%, 9.7%→6.5%).

개정된 세법 하에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의 개인소득세 증가율은 1.7%, 법인소득세 증가율은 3.5%이며, 2028년까지 각각 연평균 6.3%,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지출 전망

2019년 예산안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국방 분야 지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무지출과 국방 제외 분야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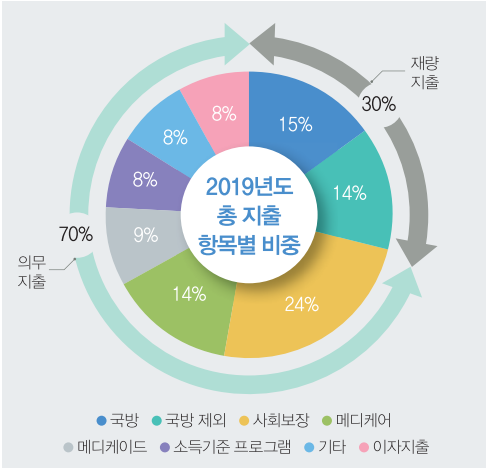
2019년도 예산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 결정되는 지출인 의무지출은 3조 1,026억 달러로 전년보다 1,993억 달러 증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70.4%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내역 중 메디케이드(Medicaid)와 소득기준 프로그램의 증가율이 낮은데 이는 메디케이드 개혁 및 복지체제 개편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다.[2]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복지 개혁,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 개혁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복지지출 삭감의 목표는 복지 수급자의 재취업을 증진하고, 급식 보조 등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는 기준선 전망[3] 대비 메디케어 지출 절감(−20억 달러), 소득기준 프로그램 중 복지 체계 개혁(−230억 달러), 연방 학자금 대출 개혁(−6억 달러) 등의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표 3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의 재정지출

(단위: 십억 달러, %)

		2018 (A)	2019 (B)	증감	
				금액 B−A	증감률 (B−A)/A
재량지출	국방	634.0	678.2	44.2	7.0
	국방 제외	635.7	626.0	−9.7	−1.5
	계(A)	1,269.7	1,304.1	34.4	2.7
의무지출	사회보장	986.5	1,046.5	60.0	6.1
	메디케어	581.7	624.7	43.0	7.4
	메디케이드	400.4	412.0	11.6	2.9
	소득기준 프로그램	333.7	326.5	−7.2	−2.2
	기타	290.7	329.6	38.9	13.4
	이자지출	310.3	363.4	53.1	17.1
	계(B)	2,903.3	3,102.6	199.3	6.9
총계(A+B)		4,173.0	4,406.7	233.7	5.6



자료: OMB, An American Budget–President's Budget FY2019, 2018.2.12.

2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지원된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조 제도이다.

3 지출 구조조정 없이 경기 전망, 전년도 서비스 지출 증가율을 통해 산출한 수입·지출·수지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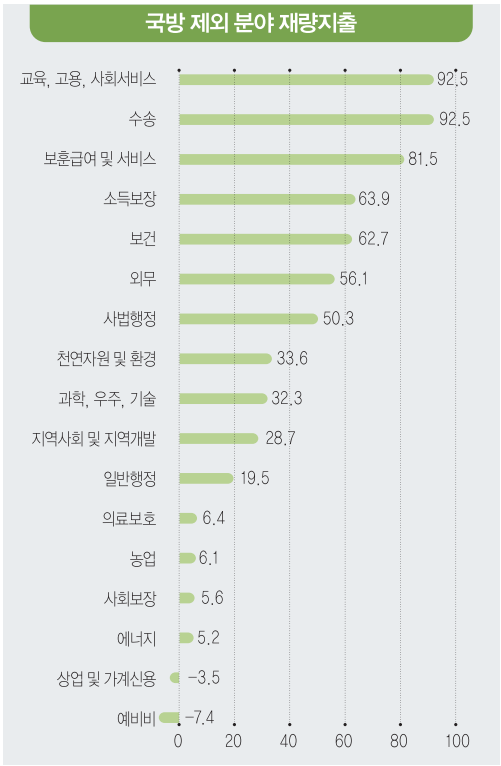
국방 분야의 재량지출은 총 지출 대비 15.4%인 6,782억 달러이며 전년보다 442억 달러 증액되었다. 반면 국방 제외 분야는 97억 달러 축소된다. 국방 제외 분야 재량 예산 중 예산이 확대되는 분야는 과학 · 우주 · 기술, 보훈급여 및 서비스, 일반행정 등 3개이며, 나머지 13개 분야는 전년보다 축소된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분야는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년 대비 32.8%가 축소되며, 농업(12.9%), 천연자원 및 환경(9.4%), 소득 보장(7.7%), 보건(7.7%) 등의 순으로 축소 비율이 크다.

국방 분야 제외 재량지출 축소는 2페니 계획(2-penny Plan)이라고도 하며, 매년 재량지출의 국방 제외 분야를 기준선 대비 2%씩 감소시켜 국방 예산 증가분을 상쇄하는 것이 목적이다.[4] 이를 위한 2019년도 국방 제외 분야 재량지출 감축액은 270억 달러이다. 장기적으로 국방 제외 분야 재량지출을 축소시켜 2015년 재정지출 총액 대비 비중을 2019년도 15.2%에서 2023년도 9.4%, 2028년도 7.5%까지, GDP 대비 비중을 2019년도 3.0%에서 2023년도 1.5%, 2028년도 1.3%까지 낮출 계획이다.

표 4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의 재량지출

(단위: 십억 달러, %)

분야		2018 (A)	2019 (B)	증감	
				금액 B-A	증감률 (B-A)/A
국방		634.0	678.2	44.2	7.0
국방 제외	수송	93.5	92.5	-1.0	-1.1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94.1	92.5	-1.6	-1.7
	보훈급여 및 서비스	76.3	81.5	5.2	6.8
	소득보장	69.2	63.9	-5.3	-7.7
	보건	67.9	62.7	-5.2	-7.7
	외무	58.0	56.1	-1.9	-3.3
	사법행정	54.4	50.3	-4.1	-7.5
	천연자원 및 환경	37.1	33.6	-3.5	-9.4
	과학, 우주, 기술	31.6	32.3	0.7	2.2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	42.7	28.7	-14.0	-32.8
	일반행정	18.5	19.5	1.0	5.4
	의료보호	6.7	6.4	-0.3	-4.5
	농업	7.0	6.1	-0.9	-12.9
	사회보장	6.0	5.6	-0.4	-6.7
	에너지	5.5	5.2	-0.3	-5.5
	상업 및 가계신용	-4.9	-3.5	1.4	-28.6
	예비비	-28.0	-7.4	20.6	-73.6
	계	635.7	626.0	-9.7	-1.5
재량지출 계		1,269.7	1,304.1	34.4	2.7



자료: OMB, An American Budget-President's Budget FY2019, 2018.2.12.

4 2페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 지출 증액 등의 공약 이행의 재원 확보 공약이었던 페니 계획에서 시작했다. 1페니는 1달러의 1%이며, 페니 계획은 지출을 1%씩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페니 계획은 2%씩 감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니 계획으로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재정지출 확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방 분야 지출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라 국방 투자가 크게 증액된다. 의무 · 재량지출을 합한 2019년도의 총 국방 예산은 6,886억 달러로, 2017년도 6,190억 달러에 비해 11.2% 증가했다. 국방 예산 증액의 목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인도 지역의 안보 강화에 있으며, 예산 증액분은 미군 병력 증원, 신규 무기 획득 등에 활용된다.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대통령 예산안과 함께 발표된 사회기반시설 투자 계획(Infrastructure Initiative)은 향후 10년 간 연방-지방-민간 지출을 1조 5,000억 달러 확대하여 1970년대에 설치된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현대화 및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중 연방 재정의 투자분은 2,000억 달러이다. 연방 재정지출은 인센티브 보조금 확대(1,000억 달러),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정률 보조금 확대(500억 달러), 현행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 등 신용지원 확대(14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을 위한 2019년 지출 소요액은 450억 달러이다.

마약 남용 방지 프로그램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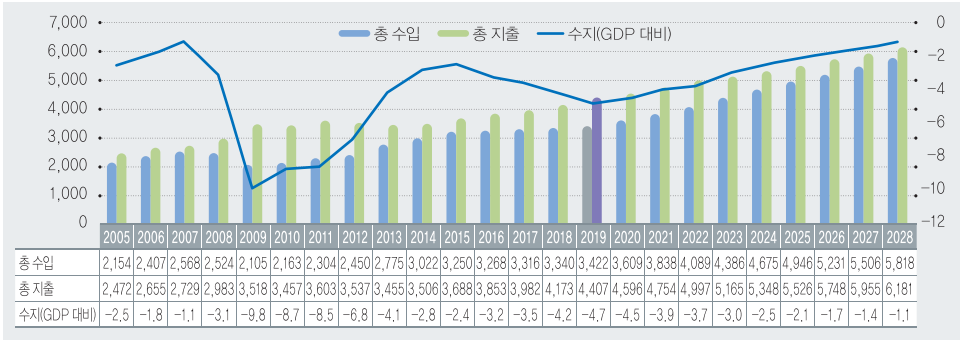
마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출(Combating the Drug Abuse)도 크게 확대된다. 이미 남용 방지 프로그램에 2017년도 5억 달러, 2018년 7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향후 5년간 50억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2019년에는 10억 달러가 지출될 계획이다. 2019년도 마약 남용 방지 프로그램 예산안은 대중매체 홍보(5,000만 달러), 주정부 마약 프로그램 지원(6억 달러), 남용 예방 및 감시활동(1억 달러),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마약 규제 강화 관련 지출(1,000만 달러), 농촌지역 마약 치료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6,5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수지 및 연방 채무 전망

2019년도의 총 수입(total receipts)은 3조 4,223억 달러로 전년보다 819억 달러(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중은 16.3%이다. 총 지출(total outlays)은 전년보다 2,337억 달러(5.6%) 증가한 4조 4,067억 달러이며 GDP 대비 비중은 21%이다. 총 수입 감소, 총 지출 확대로 재정적자는 전년보다 1,518억 달러 증가한 9,844억 달러(GDP 대비 4.7%)가 될 전망이다. 2028년까지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7%, 지출 증가율은 4%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2028년에 GDP 대비 1.1%까지 축소된다.

그림 1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의 재정수지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총 수입	2,154	2,407	2,568	2,524	2,105	2,163	2,304	2,450	2,775	3,022	3,250	3,268	3,316	3,340	3,422	3,609	3,838	4,089	4,386	4,675	4,946	5,231	5,506	5,818
총 지출	2,472	2,655	2,729	2,983	3,518	3,457	3,603	3,537	3,455	3,506	3,688	3,853	3,982	4,173	4,407	4,596	4,754	4,997	5,165	5,348	5,526	5,748	5,955	6,181
수지(GDP 대비)	−2.5	−1.8	−1.1	−3.1	−9.8	−8.7	−8.5	−6.8	−4.1	−2.8	−2.4	−3.2	−3.5	−4.2	−4.7	−4.5	−3.9	−3.7	−3.0	−2.5	−2.1	−1.7	−1.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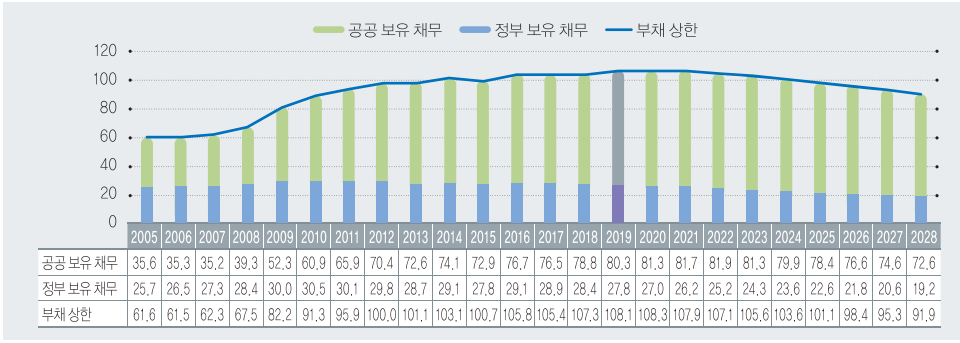
자료: OMB, An American Budget–President's Budget FY2019, 2018.2.12.

2019년 총 연방 채무(gross federal debt)는 전년보다 1조 2,246억 달러 증가한 16조 8,717억 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108.1%(전년대비 0.9%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도 법정 채무 한도는 20조 4,560억 달러이며, 실적은 20조 180억 달러로 한도를 약간 하회했다. 2028년까지 총 연방 채무 증가율은 3.4%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연방 채무 비중은 91.8%까지 낮아진다.

총 연방 채무 중 공공 보유 채무[5]는 전년보다 1조 820억 달러 증가한 16조 8,817억 달러이며, GDP 대비 80.3%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8년까지의 증가율은 총 연방 채무 증가율과 같은 3.4%이며, 2028년 GDP 대비 비중은 72.6%로 감소할 전망이다.[6]

그림 2 2019년도 대통령 예산안의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공공 보유 채무	35.6	35.3	35.2	39.3	52.3	60.9	65.9	70.4	72.6	74.1	72.9	76.7	76.5	78.8	80.3	81.3	81.7	81.9	81.3	79.9	78.4	76.6	74.6	72.6
정부 보유 채무	25.7	26.5	27.3	28.4	30.0	30.5	30.1	29.8	28.7	29.1	27.8	29.1	28.9	28.4	27.8	27.0	26.2	25.2	24.3	23.6	22.6	21.8	20.6	19.2
부채 상한	61.6	61.5	62.3	67.5	82.2	91.3	95.9	100.0	101.1	103.1	100.7	105.8	105.4	107.3	108.1	108.3	107.9	107.1	105.6	103.6	101.1	98.4	95.3	91.9

자료: OMB, An American Budget–President's Budget FY2019, 2018.2.12.

5 Debt held by public. 미국 주·지방정부와 외국인 투자자, 연방준비은행 등이 보유한 채무로 연방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차입하는 채무라는 의미에서 연방 정부 채무 판단 시 중요한 개념이다. 공공 보유 채무를 제외한 채무는 정부 보유 채무(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로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신탁기금, 단기 재정 운용을 목적으로 회계연도 내에서 발행하는 재정 증권 등이 포함된다.

6 의회예산처의 추계는 재정적자와 공공 보유 채무의 비중이 2027년에 각각 5%, 88.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항해시대의 주인공, 스페인

하연수
hayonsu@naver.com

유럽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대항해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대항해시대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은 경쟁하듯 원양항해를 시도하며 미국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아시아로 향하는 아프리카 항로 등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시기에 대항해를 시도하였을까요? 실은 중세의 서구 국가들의 취약함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에는 거대한 이슬람 국가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튀르크는 서구 국가들에 있어 목구멍의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시아와 교역을 하려 해도, 또는 아프리카와 교역을 하려 해도 오스만튀르크가 버티고 있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서구 국가들은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향료가 필요하였습니다. 향료는 서구 요리를 획기적으로 진보시킨 마법의 식재입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사용됨으로써 맛의 다양함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소시지나 햄 등의 가공 육류에도 향료는 빠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병에 효과가 있는 건강 촉진제로 여겨지기도 하였지요. 귀족계급을 중심으로 향료에는 많은 수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향료를 얻기 위해서는 오스만튀르크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스만튀르크와 서구 국가들은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향료에는 매우 비싼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후추 1그램이 은 1그램'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스만튀르크를 침략할 정도의 힘이 서구 국가들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스만튀르크를 우회하여 아시아와 교역하는 루트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대항해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페인은 1545년에 식민지로 삼던 남미의 페루에서 포토시 은산을 발견합니다. 이 은산을 비롯해 남미에서 산출되는 금과 은은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운반되는 금은을 관리하던 세비야 상무원의 기록에 의하면, 1503년부터 1660년까지의 약 150년 동안 160만 톤의 은이 스페인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럽 전체가 보유하던 은의 무려 3배에 달합니

시대의 주인공에서
무적함대의 몰락까지

Spain

다. 또한, 금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18만 톤이 옮겨졌는데, 이는 전체 유럽 보유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대량의 금은은 유럽의 금융 및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에서는 금화와 은화가 대량으로 유통되었으며 국제 물류가 촉진됨과 동시에 물가 상승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럽 금융혁명의 그늘에서 남미의 원주민들은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엔코미엔다(신탁)'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스페인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자에게 현지인(원주민)을 기독교 개종시키는 의무를 주고, 그 대신 현지에서의 세금 징수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포교'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원주민에 대한 무차별적 착취를 용인한 것입니다.

아메리카로 건너간 스페인인들은 기독교 포교의 간판 뒤에서 약탈과 살육을 반복하였습니다. 포토시 은산의 개발에도 수많은 원주민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492년부터 200년 동안 원주민 인구의 90퍼센트가 학살당하였습니다.

16세기의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 중동,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거느리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강한 스페인의 상징이 바로 무적함대였습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강력한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 위압에 의한 광대한 식민지를 획득하고 지배해왔습니다. 1571년에는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국가의 숙적이었던 오스만튀르크를 무찔렀으니, 명실상부한 무적함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한 스페인도 17세기에 접어들자 쇠락의 낌새를 보입니다. 강력한 무적함대는 영국 해군에 밀렸으며, 결국 17세기 중반 무렵에는 세계의 패권을 영국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쇠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재정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해시대의 스페인은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착취하고 있었음에도 만성적인 재정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디폴트도 몇 차례나 일으켰지요. 1556년에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한 펠리페 2세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광대한 스페인 판도를 상속하였지만, 넘겨받은 부채는 그보다도 많았습니다. 펠리페 2세의 뒤를 이은 3세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시점에서 세입의 8배에 달하는 부채가 있었으니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 경제를 변혁시킬 정도의 금과 은을 들여온 스페인이 어쩌다가 이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전쟁입니다.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과의 거듭된 전쟁. 거기에다 아랍에 접해있는 스페인은 오스만 튀르크와도 종종 전투를 벌였습니다. 무적함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데, 1572년부터 1575년 사이에 1,000만 더컷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스페인의 세수는 연간 500만~600만 더컷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종교정책도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개신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많은 영국, 프랑스와의 충돌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16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스페인의 일부였던 네덜란드가 독립한 것도 종교정책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유복한 지역이자 스페인 재정의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가 많던 네덜란드는 스페인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568년이 되자 마침내 그 불만이 폭발하여 독립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80년 전쟁'이라 불리며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1648년이지만, 1580년 무렵에 네덜란드는 사실상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1492년에 유대교도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돈 계산이 밝은 유대인을 쫓아낸 것은 스페인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역, 금융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 각지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던 유대인이 없어짐으로써 스페인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스페인은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최악의 세금 징수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소비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알카발라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는 중세 무렵 이슬람권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대항해시대의 스페인은 이 알카발라를 세수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애초 부동산이나 일부 상품의 거래에만 부과되었는데, 점차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식료품 등

의 필수품에도 부과되었습니다. 소비세는 오늘날에도 국가의 경기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스페인의 소비세는 그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세 대부분은 거래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마다 부과됩니다. 그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한 번만 소비세를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의 소비세는 거래 때마다 부과되었습니다.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 개의 상품이 거래업자의 손을 거칠 때마다 소비세가 축적됩니다. 물론 축적된 소비세는 상품 가격에 얹히게 되지요. 국왕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의해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상품에 이토록 높은 소비세가 부과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대항해시대의 스페인에서는 물가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물가 상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은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긴 하지만, 스페인 물가 상승은 은의 도입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스페인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세가 아닐까요? 물가가 상승하면 상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싸지고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다른 한편으로 값싼 수입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 결과 스페인은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남미의 포토시 은산에서 운반된 대량의 은은 스페인의 카디스 항구에 들어와도 내륙으로 옮겨지지 않고 곧바로 유럽 각지로 보내졌습니다. 무역수지의 결제와 국왕의 빚을 갚기 위해 각지의 상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스페인의 무역수지 악화, 재정 악화는 스페인의 해운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7세기가 되자 선박 수는 75퍼센트 이상 격감하게 되었고, 스페인의 항구는 외국의 배들로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업 역시 거의 괴멸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해운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상선으로 사용하던 선박을 전시에는 군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운업의 쇠퇴는 곧 해군력을 쇠퇴를 의미하였습니다.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급속히 그 힘을 잃게 된 배경에는 해운업의 쇠퇴가 있었으며, 나아가 재정과 무역수지의 악화가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KPFIS NEWS

국회 직원 대상 국가결산 강의 진행

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2018년 2월 26일(월) 국회 의정관에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결산 심화 과정」 중 "국가결산의 이해"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과정은 2018년 예산결산위원회를 대비하여 국가결산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처, 의원실) 소속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결산 과정과 유의사항, 전년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국가결산 보고서 구성 및 양식을 예시로 검토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IDB 회원국 통합재정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 추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는 2018년 2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IDB 재정관리팀과 함께 중남미 국가 대상 "한국의 경험을 통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의 공동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우리 원은 IDB 중남미 국가 중 1개 국가를 선정하여 재정 컨설팅 및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10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재정정보화 경험 전수, IDB-KPFIS 정책권고 보고서 발간, 서베이, 현지 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오스 재무부 재정정보화 사업 제안

한국재정정보원은 2018년 2월 23일(금) 라오스(비엔티안) 재무부를 방문하여 재무부 재정사업 담당자 및 세계은행 관계자와 dBrain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라오스 재무부를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기반의 맞춤형 재정정보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라오스 재무부는 본 사업을 통한 IT거버넌스 확보 여부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월간
나라재정
MARCH
2018 Vol. 15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현수(한국재정정보원장 직무대행)
편집위원장 박용주(재정정보연구본부장)
편집위원 장정진(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고영민(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dBrain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집간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549-5298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MARCH
2018 Vol. 15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ISSN 2508-8971